



1946년 3월 창간 제 2724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6월 11일 (음력 5월 9일) 화요일

# 湖南新聞

## 광주서 최저임금 공청회…속도·차등적용 놓고 노사 ‘이견’

使 “최저임금 인상 따른 경기 악화…업종별 차등적용 필요”

勞 “체감 효과 적어 보완 필요…차등적용은 취지와 어긋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10일 광주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임금 인상 속도와 폭, 업종별 차등 인상 등을 놓고 노사가 팽팽하게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광주고용센터에서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광주지역 내 노동자·사용자 대표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임승순 부위원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상임 위원들도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폭에 대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김정훈 광주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직원 수가 20여명이었던 지역 모 제조업체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경영이 어려워져 다른 업체에 인수됐다”면서 “지역 중견기업 조차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직원 수를 줄이고 폐업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이 현장에서 잘 이뤄지고 있는지 각성해야 한다”면서 “주류수

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1만원 수준을 넘었다. 생계비 수준을 보장한다는 입장과 정책 취지는 이미 달성됐다”고 주장했다.

미록천 대한제과협회중앙회 부회장도 “2~3년 사이에 광주지역 내 빈 상가가 늘어났다. 줄어드는 영업이익에 반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이 부득이하게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부담 때문에 직원 수를 크게 줄이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 급속한 인상은 더욱 큰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영임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신입법위가 늘어나면서 실제 수령 급여가 오히려 줄었다”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신입법위에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신입 법위 조정을 통해 노동자를 두 번 우통하는 처사는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송영수 (주)티디글로벌 대표는 “속도 조절 없이 최저임금을 인상 만 하고 있다. 업종별로 구분해서

맞물려 인력충원 없이 기존 인력이 단축된 노동시간에 맞춰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초과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실제 수령 급여는 줄었다”면서 “노동자의 생활 안정 등을 꾀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 공약대로 최저임금은 1만원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선의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 사무국장도 “방문요양노동자는 시급 노동자다. 현 최저임금으로는 교통비로 지출도 벅차다. 돈이 있어야 쓰고, 돈을 써야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또 “최저임금을 제대로 책정, 실질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요양보호센터에 지원하는 일자리 고용안정자금 등이 실제 노동자들을 위한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영수 (주)티디글로벌 대표는 “속도 조절 없이 최저임금을 인상 만 하고 있다. 업종별로 구분해서

##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

0.(월) 10:30 광주고용센터 11층 대회의실

최저임금위원회



10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고용센터 대회의실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최저임금제 적용의 차별이 아닌

‘차이’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업종 간 차이를 고려해 내국인, 청년 고용을 촉진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달라”고 전했다.

남상철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1과장은 “최저임금 신입 법위에 따른 최저임금에 대한 셀법이 업종에 따라 다르다. 최저임금제도의 업종별 구분은 필요해 보인다. 적어도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원정책

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방청석에

있던 일부 노조 관계자들은 ‘지

역·업종별 차등 적용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

정하는 최저임금제의 본 취지와 어

긋난다’며 반박했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제도 준수

여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고

용 위축 등 후유증을 줄이려면 실

버 고용세 도입 등 시급제 조정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회원 20여명

은 이날 공청회장 안팎에서 손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최저임금 1만원 보장’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 지난 5일 서울을 시작으로 이날 광주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어 오는 14일 대구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다.

신동우 기자

## 광주지역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증가…보호구역 확대 지정

광주시는 고령인구 증가와 맞물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일제 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지역 노인인구는 2016년 16만6389명에서 2018년 18만7186명으로 12.5%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311건(2016년)에서 356건(2018년)으로 14.5% 증가했다.

광주시는 지난 3월 시 감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노인보호구역

구역 컨설팅 감사결과를 토대로 기존 노인보호구역 48곳에 대해 현장 조사 후 37곳의 교통시설을 정비키

역을 확대 지정한다.

현재 시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노인보호구역은 지정대상 시설 1677

2016년 311건→2018년 356건 14.5% 증가

노인보호구역 지정 3% 불과해 확대 방침

로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으며 이달 중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구

곳에 비해 매우 낮은 3%에 불과해 노인 교통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

을 받아왔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협조해 노인

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양동시장, 대인시장, 밀비우시장 등 어로신 통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지역 5곳을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

송상진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노인보호구역 일제 정비를 통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반 운전자들도 노인보호구역에서 차량 속도를 감속하는 등 안전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 전남도, 적조 피해 최소화 선제적 대응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적조 상황을 평가하고 적조 발생 시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조 예찰 및 효율적 방제 대책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적조 대응 초동 방제로 피해 없는 해를 달성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간 유해성 적조 발생이 일부 지역으로 제한되고,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가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김성환 기자

湖南新聞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



소비자가 선택한 2019년 가장 기대되는 브랜드

##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담양군’

대제회관 대승회당 새마을운동연합회 담양군립도서관 조합장 무정동협동조합 조합장 수북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월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창봉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농협행담양군지부 지부장 부의장 담양군수 대상 박순진 대상 박경호 대상 김철원 대상 고병주 대상 최형주 대상 주식 전라남도 담양 ‘메타세쿼이아길’